

보도자료

배포 날짜

2026. 6. 16. (화)

총 4페이지

2026년 6월 16일 대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1

구분

보도요청

수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솜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대구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총 4장

담당자

이은영 센터장

연락처

053-427-1319

성명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과 정부·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 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해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조직적이고 교묘한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 서울신문의 기획 보도(<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되는 디지털 성착취 피해 경험자는 최소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해자들은 SNS와 오픈채팅방을 종횡무진하며 먹잇감을 사냥하듯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모두 내 탓 같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범죄의 고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원 체계와 보호 인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압도적인 권력 차이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 범죄'다. 대구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오랜 기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해 온 단체로서, 성착취 범죄의 실태를 고발하고, 무책임한 플랫폼 기업과 사법부, 그리고 현장의 한계를 외면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1. 플랫폼의 '청소년 이용 불가' 조치, 뒤늦은 방증일 뿐이다

최근 구글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의 이용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만 19세 이상)'로 상향 조정한 사건(한국일보 보도 등)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이는 엑스 내에 성착취 유인 광고와 비동의 성적 영상물이 범람하고, 특히 자체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그록(Grok)'이 필터링 없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할 수 있는 위험 환경이 되었음을 앱 마켓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다.

그러나 등급 조정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이미 엑스는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핵심 통로로 기능해 왔다. 연령 등급을 올리는 임시 방편만으로는 교묘하게 범망을 우회하는 범죄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결코 격리할 수 없다. 플랫폼 기업들은 선제적인 필터링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유해 환경 차단 메커니즘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2. “반성해서 집행유예“? 사법부의 숨방망이 처벌이 가해자를 키운다.

성착취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더라도 법정이나 학교에서 “네가 돈(대가)을 바라고 먼저 연락한 것 아니냐“, “원래 놀던 아이 아니냐“라는 왜곡된 시선을 마주하게 된다.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오히려 신고한 것을 후회하는 '2차 피해'의 악순환 속에 고통받고 있다. 반면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범죄자들은 법정

에서 “연애였다“, “쉬워서 그랬다“라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법부의 태도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사법부는 가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49%에게 ‘초범이라서’, ‘반성문을 제출해서’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 사법부의 유약한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며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신고 이후 더 큰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자발적 성매매’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폭력 이자 범죄다. 더 이상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공간을 중횡무진하는 가해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발찌’ 수준의 강력한 감시와 사법적 처벌이 절실하다.

3.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 체계는 여전히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에 머물러 있다. 온라인 그루밍 예방 교육,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다. 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 전문인력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은 피해 발생 이후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회복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공공투자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를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대구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날로 급증하고 고도화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응하며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온라인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현장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해지는 피해 양상에 비해 현장의 전담 상담원 수는 단 3명에 불과하여 심각한 업무 과부하와 소진 상태에 놓여 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결국 대구 지역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제때 전폭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치명적인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결

을 중단하고 감경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

하나. 구글, 애플, 엑스(X)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연령 등급 조정이라는 눈가림식 대책을 넘어,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물 유통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24시간 실시간 탐지 및 유해 환경 차단 시스템을 즉각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와 대구광역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상담원의 인원 보강 등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라!

대구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안전하게 숨 쉬고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곁에 함께할 것이다.<끝>

2026. 6. 16.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대구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